

정부 “불합리한 규제 신속개선” 에너지·소방 등 현장부담 완화

김민석 총리, 용인 클러스터 점검
622조 투자 세계 최대 단지 조성
소방·건설 기준 현실화, 안전은 강화
기업애로 해소해 반도체 경쟁력 ↑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공장의 건설·운영과 관련해 현장과 괴리가 큰 에너지, 소방, 건설 등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제혁신을 통해 세계 최대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 앞당긴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방문해 반도체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산업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관계자, 광노성 SK하이닉스 대표, 윤종필 에코에너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은 없는지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논의된 규제 개선 사항은 ▲소방관 진입장 설치기준 개선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 개선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적용 제외 특례 도입 등이다.

김 총리는 “반도체는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다. 지난해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7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

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팹 구축을 목표로 총 622조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고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라며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나아가 우리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또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하되, 건설현장에서 자칫 안전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안전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2에 따르면 건물은 실제 높이와 무관하게 11층까지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반도체 공장은 한개 층의 층고가 약8m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3배쯤 높다. 6층 이상의 경우 사다리차가 닿지 않아도 법령에 따라 진입창을 만들어야 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공유됐다. 앞으로는 진입창 설치 기준에 층고뿐만 아니라, 높이 기준도 추가로 설정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높이에는 진입창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현행법상 계단실, 복도, 승강기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가 면제되지만 설비배관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정이 의무화돼 있다. 반도체 공장의 설비 배관은 일반적인 건물과 달리 배관 크기가 크고 라인 수가 많아서 공사 비용이 많이 든다.

참석자들은 대안책을 모색한 결과, 올해 하반기 중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반도체 팹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분산에너지 설비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예정돼서 인근 지역으로 생산된 에너지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또 향후 동일 산업단지에 의무설치량 이상의 발전설비가 설치될 경우, 분산에너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특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세제 지원 확대

기재부, 6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특례 기준이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22일까지 6개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다.

기재부는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시 기존 보유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기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에서 수도권은 4억원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9억원으로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 주택수 제

외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대상은 비수도권의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한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 5개,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 2개 등 총 7개 기술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AI는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 등이다. 미래형 운송 기술은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등이 추가된다.

이 밖에 신성장·원천기술 세부 기술에는 방위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이 추가됐다.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되면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 30~40%)이 적용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국가전략기술보다는 낮지만 일반 R&D보다는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 20~30%)이 적용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39세이하 한부모가구 비중 8%대 육박

통계청, 청년부모 10명 중 8명은 여성

배우자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청년 부모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는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9세 이하 청년 가구 중 한부모가구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청년(20~39세) 한부모가구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녀가 있는 청년 가구는 총 106만4839가구였다. 이 중 한부모가구는 8만1452가구로 7.6%를 차지했다.

한부모가구는 청년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와 함께 살고, 다른 한 명은 사망·이혼·미상인 경우를 가리킨다.

한부모가구 비중은 2020년 6.7%에서 3년 사이 0.9%포인트(p) 높아졌다. 2020년 6.7%, 2021년 7.1%, 2022년 7.4%, 2023년 7.6% 등으로 연평균 0.3%p 증가했다.

특히 청년한부모가구의 가구주 중 여성의 비중이 78.2%에 달했다. 남성은

21.8%에 그쳤다. 반면 양부모가구의 가구주 성별은 남성이 73.9%였다.

청년 한부모가구 중 ‘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66.9%로 가장 많고, ‘부와 자녀’만으로 이뤄진 가구는 16.9%에 불과했다.

이혼·사별 등으로 불가피하게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됐을 때, 사회적으로 그 양육과 생계 부담이 대부분 여성에게 지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대 초반(20~24세) 가구주 중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 비율은 42.4%로 남성(7.2%)보다 6배 높았다. 20대 후반(25~29세)에서도 여성 28.8%, 남성 4.6%로 격차가 뚜렷했다.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에서도 여성이 각각 15.8%p, 17.3%p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6.9%)보다 비수도권(8.4%)에서 한부모가구 비중이 높았다. 전북(11.1%), 제주(9.7%) 순으로 높았던 반면, 세종(4.4%), 서울(6.0%)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국가채무 1240조 돌파… 추경에 빛 불어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9월호’ 발표
관리재정수지 적자 86조, 역대 3위
올해 111조 적자 전망… 건전성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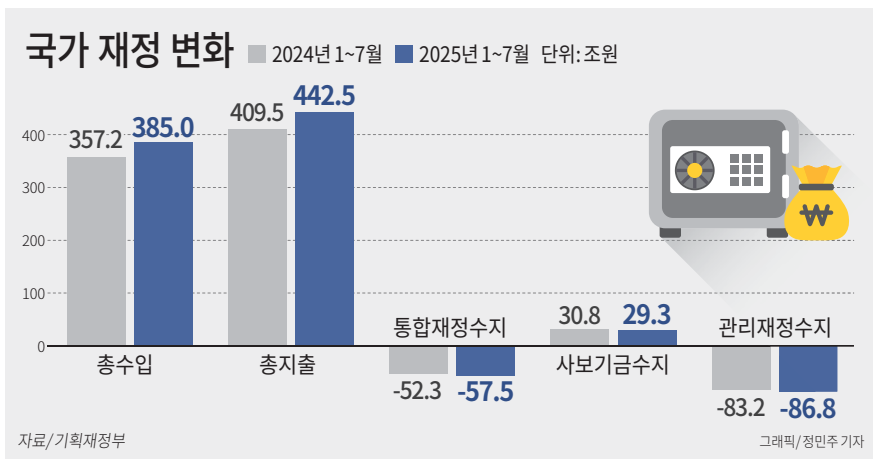
올해 7월까지 중앙정부 채무가 전달에 비해 18조원 넘게 늘어났다. 2차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데 따른 나랏빚 증가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세 번째로 규모가 컸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7월 말 기준 124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18조9000억 원 늘었다.

7월 중순 국회를 통과한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이 재정동향에 반영됐다. 정부는 2차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올해 국가채무가 1301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재부의 황희정 재정건전성고장은 “총지출에 추경이 반영됐고 현재까지 2차 추경 집행실적이 반영된 수치”라며 “2차 추경이 반영돼도 추경 전액이 이달 지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중 국채가 1239조1000억원으로 채무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고채권이



1138조 원, 국민주택채권이 77조4000억 원, 외평채권이 23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7월 총수입은 385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조8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이 23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8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14조5000억원)가 늘고, 성과급 지급 등 소득세(9조원) 증가한 데 기인했다.

세외수입은 21조2000억원으로 2조7000억 원, 기금수입은 131조2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각각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42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조원 증가했다. 일반

회계 지출이 253조8000억원으로 26조3000억원 늘었고, 기금 지출도 127조2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로 인해 7월 누계 기준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작년보다 적자 규모가 5조1000억원 늘어나 -57조5000억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금 흑자(29조3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역대 세 번째로 가장 크다. 적자가 가장 컸던 때는 2020년으로 7월 누계 기준 98조1000억원이었고 두 번째는 2022년으로 86조8300억원이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국-카자흐, 온실가스 감축 협력

환경부, 국제감축사업 현황 점검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환경부는 12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제1차 한국·카자흐스탄 파리협정 제6조 이행 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 확대 논의를 위한 자리다.

회의에서 양국은 파리협정 제6조 이행을 위한 자국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이 추진 중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다.

파리협정 제6조는 다른 나라와 협력하거나 국제탄소시장을 활용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이다.

환경부는 현재 카자흐스탄 매립장 두 곳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포집해 소각한 뒤 전력발전까지 연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2건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또 환경부가 추진 중인 2건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